

##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승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657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8. 8.

발 의 자 : 김승원 · 서영교 · 이건태  
김정호 · 김용민 · 이성운  
전현희 · 장경태 · 박지원  
박균택 · 김병주 · 한준호  
김민석 · 임호선 의원  
(14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난 2023년 압수·수색영장은 총 498,482회 청구되어 총 455,485회 발부되었음. 이처럼 형사절차에서 압수·수색의 중요성은 대단히 크며, 특히 최근에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·수색이 증가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압수·수색영장의 발부 전에 법원이 사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는 근거를 두지 않고 있고, 전자정보에 대하여 압수·수색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기간 제한만을 두도록 하고 있을 뿐 압수 대상이 될 전자정보를 특정하기 위한 검색어 등을 한정하도록 하고 있지 않음. 이 때문에 수사에 있어 수사기관의 압수·수색이 필요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법원이 압수·수색영장의 발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고, 전자정보의 압수·수색영장

에는 압수 대상인 전자정보를 특정하기 위한 검색어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압수·수색에서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109조의2 등).

##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9조의2(압수·수색의 심리)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수·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 심문기일을 정하여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.

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압수·수색할 물건이 전자정보인 경우 전자정보가 저장된 정보저장매체, 정보의 검색에 사용할 검색어 및 검색 대상기간 등 집행계획

제219조 본문 중 “第109條 乃至 第112條”를 “제109조, 제109조의2,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”로 한다.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第114條(영장의 방식) ①압수·수색영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압수·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제109조의2(압수·수색의 심리)</u></p> <p>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압수·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 심문기일을 정하여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.</p> <p>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</p> <p>第114條(영장의 방식) ①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<u>&lt;단서 삭제&gt;</u>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<u>압수·수색할 물건이 전자정보인 경우 전자정보가 저장된 정보저장매체, 정보의 검색에 사용할 검색어 및 검색 대상기간 등 집행계획</u></p>

[illegible]